

일본의 21세기 동맹전략: 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손 열
연세대학교


2009년 1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09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일본의 21세기 동맹전략: 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손 열
연세대학교 교수

I. 서론

2009년 11월 오바마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면서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펼쳤다. 천황에게 깊은 90도에 가까운 깊은 절을 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후, 산토리홀연설에서 본인이 취임 후 맞이한 첫 외국지도자가 일본수상이었으며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를 아시아로 정한 것은 50여 년만이며 일본이 그 첫 번째 방문국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이며, 자신은 태평양적 정체성을 갖고 있고, 미일관계는 “불멸의 동반자(indestructible partnership)”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미일관계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군사동맹의 동반자를 넘어서 경제회복과 균형성장, 기후변화, 비확산, 인간안보 등 지구적 이슈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bama 2009).

여기까지는 과거 부시정부의 대일정책과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속에서 일본의 지위는 변화하고 있다. 부시의 미일동맹이 동아시아외교의 초석(cornerstone)이었다면 오바마는 기존의 동맹이 갖는 한계를 인식한 위에서 복합적인 지역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그는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일본과의 동맹약화를 의미하지 않음을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아세안 및 APEC란 다자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군사와 경제를 넘는 소프트파워적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이는 아태담당 국무차관보인 캠벨(Campbell 2008)의 이른바 “균형력(power of balance)”이란 개념으로 이해된다. 미국은 근대적 의미의 세력균형을 넘어 서로 다른 이슈영역간의 균형, 양자와 다자간의 균형,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균형, 다양한 행위주체에 의한 균형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 동아시아관계에 있어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보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구상의 이면에는 그간 부시의 미국이 대테러전 수행과정에서 보여준 하



드파워 중심 전략의 한계가 노정되어 오면서 소프트파워적 관점에서 새롭게 동맹의 의미를 찾게 된 측면이 있다(Armitage and Nye 2007b).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경사가 초래한 부작용을 치유하려는 모색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위기를 계기로 추락하고 있는 미국의 하드파워(경제력)의 영향이다. 미국은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국경제 추스르기에 바쁜 실정이다. 대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하드파워의 여력이 축소되는 속에서 이를 소프트파워로 보전하여야 한다. 2007년까지 미국의 소프트파워론이 하드파워의 과잉을 소프트파워로 보완complement하려는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불과 1년 후인 2009년 초의 소프트파워론은 하드파워의 쇠퇴를 메워나가야 하는 기울어가는 초강대국의 아쉬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클린턴의 스마트외교(Clinton 2009a), 게이츠의 균형전략(Gates 2009), 그리고 캠프벨의 균형력(2008)이 이런 고민 속에서 등장한다. 미국은 동맹국 및 기타 우호세력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양자 및 다자적 전략적 관계를 균형적으로 활용해 가려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삼중의 고민을 안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의 능력과 의지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구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이 부과하려 하는 더 많은 역할과 부담, 혹은 반대로 미국의 일본 통과하기passing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둘째, 이 고민은 21세기 들어서면서 일본이 부딪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그 핵심이다. 이질적 정치체제인 데다가 역사문제로 정체성의 갈등상황을 연출해 온 상대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역전은 사실상 초읽기에 접어들었고, 군사비는 역전을 넘어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끝으로 일본경제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시장이 축소되면서 상상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드파워의 상대적 쇠퇴가 완전한 만큼 외교적 수단의 제약을 안고 있다.

일본이 20세기초 영일동맹적 발상으로 21세기에 미일동맹을 활용해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20세기 초 일본은 한편으로 당시 세계패권국인 영국과 동맹을 맺고, 다른 한편으로 부국강병을 일관되게 추구하여 러시아를 꺾고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반면, 21세기 동아시아의 전략환경은 국제정치의 단위체와 장場의 속성이 달라 전통적 균세와 자강의 전략으로 성공을 이끌기는 불가능하다(하영선 2006). 21세기 핵심국가로서 미국은 동아시아를 국민국가라는 노드node 중심의 전통적 세력균형 혹은 전통적 상호의존의 장을 넘어서, 다양한 행위자(노드)가 다양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다층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집합체로서 인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장에서 미국은, 균형력적 표현을 빌리자면, 통합integrating, 혁신innovating, 투자investing로 엮는 아시아네트워크Asia의 건설자designer인 동시에 운영자administrator를 지향하고 있다(Campbell 2008, 25-26).¹ 여기서 동맹은 새로운 의미를 띤다. 전통



적 동맹이 노드의 크기와 속성에 따라 형성되는 제도이라면, 새로운 동맹은 노드와 링크를 엮어 가는 네트워크적 발상 하에서 상이한 속성의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복합동맹네트워크로 규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일본과 군사, 반테러, 경제, 환경, 에너지의 영역에서, 또한 양자, 지역, 지구의 층위에서 복합적 동맹을 추구하며, 동시에 다자관계도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적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은 보다 복합의 네트워크 속에 새롭게 위치되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은 새로운 전략환경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당정권은 근대적 동맹만으로 21세기를 헤쳐갈 수 없다. 대안으로서 하토야마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동아시아공동체의 추진이란 새로운 외교전략을 선보이고 있다(Hatoyama 2009). 그러나 단순히 동맹에서 공동체로의 상대적 이동으로는 21세기 동아시아를 헤쳐가기 어렵다. 동아시아는 복잡한 공간이므로 보다 복잡한 사고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일본이 당면한 21세기 전략환경 하에서 추진해 온 동맹정책의 변화와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은 일본이 마주한 전략환경을 기술한다. 그 핵심은 중국의 하드파워적, 소프트파워적 이중 부상에 따른 위협인식이다. 제3절은 동맹에 대한 일본 국내의 서로 다른 인식 속에서 특정 전략이 부상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미국과의 동반 변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이 주 사례가 될 것이다. 제4절은 두 전략의 결과로서 재균형의 과제, 하토야마정권의 대응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21세기 전략환경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된 바 없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등 전후지도자는 소련이 일본의 직접적 위협요인이 아니라 보았고, 진보진영이 비동맹 중립을 요구하였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1980년대 소련이 극동군사력을 증가시켜 상황은 변화하였으나 이 역시 미소간의 냉전대립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었고 일본에게 위협은 이차적인 것이었다. 2000년대 들면서 9-11 동시다발테러를 계기로 비국가행위자 네트워크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이 현격히 증대되었으나 미국과 달리 일본에게는 이차적인 위협이었다.

전후 일본에게 최초의 본격적인 안보위협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을 시도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안보의 불안정성을 높여놓았다. 특히 1998년 8월 대포



동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가로질러 태평양에 추락하였을 때 일본은 경악하였다. 2001년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북한선박(간첩선)을 격침한 것은 일본이 무력을 사용한 전후 최초의 사건이었을 만큼 북한은 명시적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동맹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대포동 미사일 사건은 미 일가이드라인의 법제화, 미사일방어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이원덕 2002). 한편, 북한이 일본의 위협의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보수지도자들은 북한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납치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같은 젊은 정치가를 전국적 인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자산이었다.

보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위협인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은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 일본의 GDP를 따라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일전쟁 이후 무려 105년 만에 국력의 재역전이 일어나는 역사적 순간이다. 지난 한 세기 일본은 역동적이고 강력한 아시아(국가)를 마주한 적이 없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표현처럼 일본은 “**亜細亜東方の悪友**”로부터 떠나 새로운 문명의 기준에서 이들을 문명화할 대상으로 보았고, 결국 서양제국주의와 경합의 장 즉, 식민화/반식민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패전 후 일본은 냉전적 조건 속에서 아시아와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지 않고서도 서양 속에서 또 한차례의 부상을 성취하였던 만큼, 아시아는 일본의 경쟁상대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였다. 더욱이, 현재의 추세는 2002년 골드만삭스가 내어 놓은 보고서 <Dreaming with the BRICS (2003)>에서 일중 역전이 2018-2020년 경에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을 훨씬 앞당기고 있다. 그 만큼 일본에게 심리적 충격은 가중되고 있다 (Pyle 2007, 202).

중국의 부상은 단순히 일중간 경제규모의 축소와 역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일본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는 추세가 자리하고 있다. 2002년 일본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들어선 데에는 대중국 수출의 증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2003년 일본의 수출성장의 90%가 대중국 수출이었을 만큼 중국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amuels 2007). 이는 1990년대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일본에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는 즉, 일본의 직장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중국위협론을 넘어서 일본이 중국과 비대칭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어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새로운 위협론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역전은 곧 군사역전을 의미한다. 중국은 십 년 이상의 두 자리 수 성장 덕분에 일본의 국방비를 상회하는 액수의 투자를 통해 군사력의 현대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은 4세대 전투기 공중급유기, 첨단 잠수함, 공중정보통제시스템(AWACS) 등을 구비하였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도 향상시켜왔다. 또한 중국은 해공군력을 현격히 향상시켜왔다.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은



중국의 능력 못지 않게 의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왔다.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작업이 완수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으며 동지나해와 남지내해에서 무력의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센카쿠(혹은 다오위타이)와 대만 주위에서 일중간의 군사적 균형에 변화를 꾀하려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단순히 세력배분의 변화에 따른 현실주의적 판단의 결과를 넘어서 양국관계의 역사적 맥락에 기인한다. 일본과 중국은 중화질서의 해체 이래 줄곧 경쟁관계이었다. 19세기 근대세계에 진입한 이래 양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기 위한 공수(攻守)의 경쟁을 벌였고, 청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은 중국의 반식민지화에 적극 나섰으며 결국 전면 침략의 길을 걸은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중국은 역사문제에 뿌리를 둔 반일감정으로 일본이 가진 객관적 군사력을 넘는 위협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Christensen 2003, 27). 또한 애국주의 교육이 이를 증폭시켰다(毛利 2006, 155-56). 이러한 반일감정은 일본에게 위협요인이었다. 일본은 중국이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반일감정을 희책하고 있으며 따라서 역사문제에 관한 중국의 공세는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둘러싼 역사공방, 교과서문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갈등 등을 거치면서 일본의 대중인식은 악화일로를 걸었고, 이에 따라 대중 위협인식 역시 증폭되었던 것이다.²

세력배분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현실주의적 위협과 함께 역사적, 감정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일본은 중국을 경쟁자이며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했다(Green 2001). 이런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사무엘즈(Samuels 2007)가 지적하듯이 동맹상대인 미국은 적대적인 인접국들만큼이나 일본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동맹이 가져다 주는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동학 때문이다. 미일동맹은 전후 일본에 안보를 제공하는 핵심수단인 동시에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재이었다(Ikenberry 2004).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안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반테러 “의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에 참가를 원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면 방기의 위협에, 이에 참여하면 연루의 위협에 처하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핵심적 이익과 가치가 서로 수렴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약속(commitment)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때 동맹실패의 위협을 맞이하는 것이다. 양국은 여러 사안에서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란, 북한 문제 등의 처리에 있어서는 분명한 상이를 보여왔다. 역사문제, 동아시아공동체 이슈 역시 양자간 입장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다(Samuels 2007).

동맹의 동학이 주는 위협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연결될 때 배가된다. 미국이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자 경제대국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은 미국이 적어도 단극 질서를 유지해 갈 만한 하트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다. 반테러전쟁의 수행과정 그리고 이라크 점령부흥정책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의 손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이라크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적 능력이 한계를 보이는 속에서 일본은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의 능력과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인 동시에 핵심적으로 미국의 위기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미국이 주도해 온 전통적 동맹, 지역안보질서, 기타 안보협력틀이 동요할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는 중국, 실존적 위기에 처한 북한, 흔들리는 미국이란 삼중의 위협을 동시에 해결하는 비교적 용이한 결론은 미일동맹의 강화이다. 동맹을 통해 일본의 군사능력을 향상시켜 중국과 균형을 취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미국을 바짝 끌어안아 방기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위협은 인지(perception)이며 인지는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또 변화한다. 위협과 정치적 계산, 대응은 국내정치와 담론을 통해 생산된다. 중국 및 동맹을 둘러싼 국내인식의 차이가 그것이다. 일본 국내에는 복수의 안보담론이 등장해 공존해 왔다. 이들은 각각 위협의 원천과 대응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III. 안보위협에 대한 국내담론

안보문제에 관한 일본 내의 담론은 정당 혹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로 환원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일본의 보수와 진보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 굴절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1993년까지 장기집권 속에서 보수분류 혹은 요시다독트린이라고 하는 독특한 외교노선을 유지하였다. 헌법9조를 지키는 대신 미국의 군사력에 철저히 의존하면서 경제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미국에 대한 안보위임은 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안보무임승차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할 수 있었고, 반면 미국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초석으로서 미일동맹을 활용하고 일본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다.

진보지식인과 사회당, 공산당은 헌법 제9조(평화조항)의 엄수와 비동맹 중립을 주창해 왔다. 일본의 문제(안보문제)는 일본 자신(사회구조)에 있으므로 개혁을 통해 평화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냉전 종식과 함께 급격한 퇴조를 보였다. 냉전의 두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비동맹 중립을 지키자는 목소리는 시대착오적 노선이 되어 버렸고, 제도적 기반인 사회당은 몰락하였다. 특히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위협에 일국평화주의는 공허한 메아리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



보수에게도 탈냉전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동맹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탈냉전의 동맹 인식에 대해서 자민당은 본래 다른 파벌의 연합체로 조직, 유지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다양한, 서로 다른 정책적 관점을 갖는 견해들을 분출하게 된다. 또한, 1993년 자민당정권 붕괴 이후 서로 다른 조합의 연립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진보의 정책기조가 보수화하고 보수의 그것이 진보적 요소를 품은 결과, 다양한 정책노선들이 정당의 경계를 넘어 경합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예컨대, 자민당은 미일동맹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만 아시아의 관여engagement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아시아로의 상대적 이동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두 정당 내에는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끝으로 이 두 정당을 넘어서 전통적 평화주의와 자주노선의 목소리도 상존한다. 즉, 동맹과 군사력 사용을 모두 거부하는 전자와 동맹을 거부하되 독자적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후자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담론을 제외한 일본의 전략담론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된다.

한 축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최중요 자산이며 일본의 국내제도적 한계(즉, 군사력 행사의 한계)와 하드파워적 한계(즉, 군사력 증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연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끌어안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일본의 군사적 공헌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른 한 축은 미국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므로 방기의 가능성—예컨대 아시아로부터의 철수 혹은 중국으로의 경사—에 대비하여 독자적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한 축으로 대미관계와 아시아관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다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및 아시아에 관여하면서 동맹정책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축은 “동맹(강화)론”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2축은 “자주론,” 제3축은 “균형론”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세 입장은 공히 미일동맹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상대적 비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1. 동맹론

동맹강화론의 이론적 근거는 이른바 보통국가론에서 도출된다. 그리고 그 지적 원류는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이다. 1991년 걸프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이 경제대국에 걸맞는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한 보통국가론은 자민당 주류, 經濟同友會와 経団連 등 재계단체, 그리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이끌었다. 헌법개정을 통해 보통국가로서 군사력을 보유하고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오자와 1994). 오자와가 UN의 기치하에 군사적 공헌을 하는 일종의 글로벌주의globalism적 입장을 취했다면,



고이즈미를 대표로 하는 자민당의 보통국가론자들은 보다 현실주의적^{realist}으로 미일동맹과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외교(요시다독트린)가 경제적 이득의 확보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실리외교 위주이었고 외교적 수단 역시 경제적 수단이 중심이었다면,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해 보다 세력균형적 발상의 외교를 추진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한다(Green 2001).

이러한 보통국가론자는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정부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애국주의적 교육을 강화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양국간 안보딜레마의 한 원인이라는 차원에서이다. 이들은 중국지도부가 역사카드를 사용하여 역내 일본의 영향력을 감퇴시키려 획책하고 있다고 믿는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행위 증가, 야스쿠니 문제에 따른 일본과의 고위급 대화 중단, 일본의 UN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입 저지—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중국이 일본에 대해 협조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의 급속한 변화이다. 경제역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군사역전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미 중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군사능력은 미국에 도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일본은 세력전이 속에서 본격적인 안보딜레마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길은 미국과의 동맹뿐이다. 이들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미일관계는 일본외교의 초석이며, 고이즈미가 발언하였듯이 “대미외교가 잘되면 아시아외교도 잘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일본은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미일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미국이 제안한 군사변환과 동맹변환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또한 일본의 동맹네트워크를 호주, 인도 등지로 확대하여 미일동맹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보통국가론이 현실적으로 대중 관여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 네트워크 속에서 일본이 현실주의적 균형을 위해 경제교류를 축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엮여지고 있는 경제통합의 추세 속에서 일본 역시 지역주의를 추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지역공동체에 미국이 빠져있고, 둘째로 위협대상인 중국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이 포함된 관역의 지역 즉, APEC을 선호하나 지역기구로서 그 효용가치는 이미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미일동맹에 의한 대중 동반관여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즉, 세계최강국과 연대하여 중국의 부상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동반관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이 일본과 공유될 때, 따라서 미국도 대중관여전략을 선택할 때 공동보조가 가능해 진다(Armitage and Nye 2007a). 보통국가론자들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동맹은 관여의 수단인 동시에 위협분산^{hedge}의 수단이기도 하다.



2. 자주론

경제적 능력에 걸맞는 군사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이 글로벌주의적 성향과 현실주의적 성향으로 나뉘게 된다면, 보다 이념적인 차원에서 보통국가로의 행진을 요구하는 담론과 이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반동적인 보수로서 정치권에 등장한 “우익右翼”이 그들이다. 본래 우익이란 좌익(좌코뱅)에 반대되는 일반적인 언어이나, 일본의 경우 이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우익은 “天皇尊崇의 國家主義”로서 戰前(玄洋社, 黑龍會, 大日本生産黨 등)부터 지속되어 온 정치세력으로서, 전후 특히 1980년대 등장한 “우경화”란 언어는 “우익”화의 경향을 일컫는 것이다. 1982년 교과서에서 “침략”이란 표현이 삭제되면서 시발된 교과서과동 속에서 혁신세력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우경화는 역사왜곡(역사미화)의 의미를 강하게 띤다. 우익은 전전(1868-1945)의 부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경화란 우익이 제도정치권으로 진입의 길을 걷게 되는 것, 혹은 정치세력이 우익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후지오카藤岡信勝 주도의 “자유주의사관” 그룹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수분류나 보통국가론의 역사의식을 “자학사관,” “점령사관,” “동경재판사관,” 혹은 “코민테른사관”으로 규정하고 역사수정주의 운동을 벌여나간다.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 식민지 지배의 공과 등 이슈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 그것이다. 이런 운동은 1996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이어져 니시베西部邁, 니시오西尾幹二, 에토江藤淳 등 우익저널리스트, 이토伊藤憲一, 오카자키岡崎久彦 등 국제정치학자, 이토伊藤隆, 하타秦郁彦 등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참여,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흐름으로 등장한다. 아베安倍와 같은 정치인도 이들과 같이 하고 있다. 아베가 수상재임기인 1996년 미의회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과거 군국주의, 파시즘체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규범과 제도를 부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일본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주론을 외치는 만큼 안보정책에 관해서 미일동맹에 대해 회의적이다. 일차적으로 이들은 동맹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미일동맹은 비대칭적이고 종속적인 동맹으로서 일본의 국가적 위신을 훼손하는 제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개정을 통해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주론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1992)의 “NO라고 할 수 있는 일본(ノーと言える日本)”과 같은 대미자주형 외교(혹은 일본형 드골주의)로 드러난다. 둘째로 이들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의심한다. 니시베(西部 2003)는 “친미” 보통국가론자들이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 편을 들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카니시 테루마사(中西 2003)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으며 언제 아시아에서 철수할 지 모르기 때문에, 비록 현재 일본은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므로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지만, “신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시아



인접국과의 화해나 집단안보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극히 회의적이다. 동아시아공동체는 신화에 불과하다(渡辺 2005; 2006).

우익의 지역주의에 대한 회의적 태도의 근거에는 아시아에 대한 강한 반공주의와 인종주의적 경향(별시)이 깔려있다 (知恵蔵 2001, 504).³ 따라서 이들은 중국과의 협조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들은 중국이 머지않아 문화적, 역사적 근거로 패권적 야망을 펼칠 것이거나 혹은 국내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과 내분을 겪을 것이어서 인접국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라 전망한다. 따라서 과거 케난이 대소 봉쇄론을 펼쳤듯이 대중 봉쇄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中嶋, 古參 2006). 여기에는 신뢰할 수는 없는 상대이지만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본은 미사일방어와 핵개발을 통한 자주적 대중봉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이들은 이 과정에 경제적 손실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의 반일감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각종의 불공정관행이 횡행하는 속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거래를 확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와 동남아로 흐름을 돌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3. 균형론

균형론자는 강대국화하는 중국으로부터 야기되는 안보위협이 미일동맹이나 자주국방에 의한 견제와 봉쇄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봉쇄전략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 중국이 이른바 “매력공세”로 불릴 만큼 아시아인접국들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해 온 반면 일본이 미일동맹에 안주하여서는 아시아외교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은 명확해 진다는 인식이다. 미일동맹은 중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은 담당하지만 지역주의적 경향이 깊어가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아시아에서 고립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외교지평에 있어서 아시아외교는 필수적이다. 미일동맹을 아시아외교로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진보적 성향의 일본 지성계는 아시아중시론을 담고 있다. 와다 하루키와 강상중 등의 동북아공동체론이 그것이다(和田 2003; 姜尚中 2003). 학계의 중국전문가군도 대체로 이 담론을 따르고 있다.⁴ 이들은 1978년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국가목표는 경제발전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평화로운 국제환경 구축이 외교대전략이므로 중일관계는 기본적으로 관여를 통해 안정과 평화를 기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인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해 왔으므로 이들과 정치군사적 갈등을 피하려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적 충돌



을 막을 것이란 이론이다. 물론, 이들도 강대국화하는 중국이 초래하는 불안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경제역전과 군사역전에 따르는 안보딜레마의 심화, 자원확보를 둘러싼 일본과의 경쟁, 역사갈등의 지속, 중국정치의 불안정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정치 군사적으로 균형, 봉쇄하기는 데 지불할 비용이 협조적 관계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을 상회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일본이 역사이슈를 비정치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둘째, 중국과 신뢰구축을 위한 다층적 대화채널을 가동하며, 셋째,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해 중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아시아중시 담론은 정계에서 현실세력화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시아에 대해 안고 있는 역사적 유산 때문이다. 일본은 1930년대 동아신질서,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 등을 내걸고 아시아를 엮으려다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서 오는 세가지 유산은 일본이 아시아를 품는 데 주저하게 하고 있다. 첫째, 당시 일본이 공동체 비전을 실천하여 지역구성원들의 마음을 끄는 소프트파워를 보여주지 못하고 총칼이란 하드파워에 의존하여 제국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떠한 공동체 주장도 일본에 의해 추진될 때 의심을 사고, 결국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화해가 필요하나 이는 국내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끝으로 당시 비전들에 담긴 강한 반서양주의적 경향이 주는 유산이다. 당시 일본이 주창한 지역공동체는 서양중심주의와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구상이어서, 패전후 미국을 철저히 끌어안아 안보를 위임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해 온 일본의 입장에서 지역주의란 미국추수노선에 반하는 것이기에 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이 정치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미일동맹과 아시아외교의 균형이다. 일종의 균형잡기balancing act인 것이다. 그 선구적인 인물은 후나바시船橋洋一이다. 그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일동맹은 불가피하나 그 성격이 미영동맹과 같이 상호간에 군사적 능력을 갖춘 즉, 일본의 군사력을 향상시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군사적 영역에서 적극적 공헌을 함으로써—그는 이를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global civilian power로 일컬음으로써—미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영준 2008, 제2장). 또한 그는 미일동맹이 아시아 특히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동맹이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다니구치 마코토(谷口誠 2005) 등 전직 외교관 역시 미일동맹을 유지하되 이에 지나친 경사를 교정하는 측면에서 아시아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토伊藤憲一와 다나카田中明彦이 주도하는 씽크탱크인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 역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伊藤編 2005).

정계에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UN을 중심으로 한 세계평화의 구축, 미일관계의 긴밀화와 함께 과거 전쟁의 반성을 통한 근린제국과의 기초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외교를 심화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로서 오자와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보통국가론의 기수이었으나, 자민당 탈당 이후 점진적인 아시아 이동을 보여왔다. 90년대 그가 참가한 연립정권의 일본외교는 아시아외교에 일정한 비중을 두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오자와는 2006년 민주당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아시아 중시적 정강정책을 구축하고 미일동맹과 아시아외교와의 균형을 분명히 내걸었으며 그의 당대표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북경을 택하였다. 그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의지가 쇠퇴할 것이란 전망 하에 미·중·일 삼각협조체제의 구축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오자와와 민주당의 행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세력은 일부 과거 자민당의 보수분류 세력이다. 이른바 요시다노선의 적자인 이 집단의 핵심인물로서 노나카 히로무野中広務, 코노 요헤이河野洋平, 가토 코이치加藤紘一 등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다자제도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아가 자민당 간사장을 지낸 코가 마코토古賀誠은 현재 일본에게 시급한 과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기보다 아시아인접국과의 관계개선에 있다고 주장한다(Samuels 2007, 128-29).

요컨대, 균형론은 오자와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보통국가화를 인정한 위에서 미일동맹과 아시아외교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동맹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시아와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역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입아사빠를 위한 국가정체성의 변환까지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역사문제는 본원적 의미보다 일본외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차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IV. 위협의 대응: 동맹변환

일본의 선택은 동맹강화의 길이었다. 1996년 미일 신안보선언을 통해 미일동맹을 재정의했고 이어 1997년 신가이드라인,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등 동맹강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는 시장개장과 자유화를 둘러싸고 미일 양국은 날선 대립을 보였으며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사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제안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며, 중국을 중시하는 듯한 행보로 인해 일본에서는 미국의 일본 통과하기Japan passing가 회자되기도 하였다. 21세기 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경제영역을 넘어 외교안보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동맹방기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 우익을 중심으로 한 자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역으로 동맹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대두되었다.



2001년 발족한 고이즈미 정권은 후자를 대변하였다. 잃어버린 십 년이란 장기경제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슬로건(“개혁없이 성장없다”)으로 집권한 고이즈미는 “성역 없는 개혁”을 약속하고 금융과 재정, 우정부문의 개혁에 정치력을 집중하였고 유례없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를 배경으로 해서 고이즈미는 9-11 동시다발테러란 미증유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헌법 제9조라는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한시법을 통과시키는 국내정치적 결단을 수차례 단행하였다. 이시스함을 포함한 해상자위대를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파견하고 육상자위대를 이라크로 파병한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이는 십 년전 일본이 걸프전 파병요청을 미루다가 국제적 비난의 표적이 된 전례와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에게서 자위대 파병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9-11 테러를 계기로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태세를 구축하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른바 “변환transformation”이다. Quadrennial Defense Review와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듯이 21세기 들면서 미국의 위협인식은 테러리즘을 계기로 크게 변화한다. 미국은 위협대상을 비정규형 irregular, 파멸형catastrophic, 교란형disruptive, 전통형traditional으로 분류한 후, 향후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으로 예측되는 전통형 위협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9-11테러 등에서 보듯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테러집단의 도전을 가장 커다란 위협요소로 간주하였다. 문제는 기존의 미국의 태세와 능력이 전통형 위협을 조준하고 있어 새로운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변환은 이런 맥락에서 군사력의 유연성, 다기능성, 범용성을 확보하는 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환은 미국만의 군사변환으로는 불충분하였다. 미군은 동맹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에 편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환은 동맹국과의 동반변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2002년말 시작된 미일안정보장협의위원회(“2+2”)는 이러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일본과 공유하려는 시도이었다. 2002년 12월 17일 “2+2” 공동발표문은 “국제테러리즘 및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환경속 양국이 각각의 방위태세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다.”(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December 2002) 1996년 미일안보선언이 “일본의 방위”를 주목적으로 한 냉전의 미일동맹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탈냉전의 동맹으로 재정의한 것이었다면, “2+2”는 기왕의 전통적 국가간 억지deterrence를 넘는 새로운 21세기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동맹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변환적 접근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은 낮았다. 미국의 변환에 의해 일본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미국측으로부터의 재편계획, 제안, 요구에 줄곧 주도권을 뺏긴 채 수동적인 교섭을 해 왔다. 2003년 미국으로부터



변환의 구체적인 모습이 미국에 의해 주어졌을 때 일본은 (1) “억지력의 유지,” (2) “기지(i.e., 오키나와)부담의 경감”이란 두 측면에서 변환을 이해하였다. 나아가 9-11 이후 고이즈미의 노력으로 미일관계가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일본은 억지력의 약화(힘의 공백) 우려 보다는 기지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본을 아시아와 태평양이란 광대한 영역을 엮는 동맹네트워크의 허브로 변환하려는 미국의 지구적 관심에 대해 일본은 오키나와(특히 후텐마소재 미해병대 비행장 이전문제)로 상징되는 기지부담의 경감을 피하는 국내정치적 관심으로 대응한 것이다.

변환을 기지조정/부담경감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곧 국내조정의 과제를 안는 것—국내 지자체(오키나와현)와의 합의문제—이어서 정치력 발휘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었다. 고이즈미는 일차적으로는 국내 경제개혁(3위일체 개혁, 우정민영화 등)에 전력투구하고 있었으며 또 여론에 민감한 포퓰리스트적 성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기지조정이 수반하는 반대여론의 대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양까지를 작전반경으로 두고 있는 미 제1군단을 자마기지로 이전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미일동맹의 범위를 “불안정의 호”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일본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극동조항은 유효한 기준이기 때문이었다.

변환에 관한 미국과의 인식의 수렴은 일본이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게 된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역내 세력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는 2000년대 초 동남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또 일본경제의 대중의존도가 점증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이 조직한 “대외관계 태스크포스”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근대화화 해군력의 현저한 증대가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對外關係タスクフォース 2002). 2004년 12월 “방위계획대강”에서도 북한과 중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핵미사일전력과 해공군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해양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의 동향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방위계획대강 2004).

대중위협인식의 증대는 2005년 2월의 “2+2”에서 양국의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February 2005). 양국은 “공통의 전략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구수준에서 테러와 WMD의 확산을 공통의 위협으로, 반테러, 비확산을 공통의 과제로 삼고,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자유, 법치 등 가치의 확산을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수준(아시아-태평양)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요인이 존재”한다며 북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양안문제 등을 거론하여 이에 대비할 능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일안보관계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



다. 양국은 중국에게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 급속한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군사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촉구하고 있다. 요컨대 반테러/비확산 동맹과 함께 중국전체 동맹의 성격이 공통전략목표로 드러난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변환을 받게 된 결정적 요인은 여기에 있다.

동맹강화론은 2005년 5월 “미일재편실시의 로드맵”으로 한 획을 긋게 된다. 양국군의 상호 의존의 심화와 일체화, 통합화를 이루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후, 양국은 “재편안의 실시에 의해 동맹관계의 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라 천명한다(Ibid.). 이 새로운 단계의 미일관계는 이듬해인 2006년 6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신세기 동맹US-Japan Alliance of the New Century”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The Japan-US Summit Meeting, June 26, 2006). 양국은 보편가치(자유, 민주, 인권, 법치, 시장경제)를 공통의 목표로, 반테러/비확산, 지역의 안정과 번영, 보편가치의 실현, sea lane의 보호, 지구에너지 안보의 확보를 공통의 이익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군사력의 역할, 과제, 능력을 재정의하고 군사력 재편의 로드맵, BMD 및 작전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미일동맹변환은 권력공유power sharing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단순한 군사동맹으로부터 가치, 무역, 환경, 에너지, 개발영역에서 동맹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맹의 범위를 일본열도, 지역(아시아-태평양), 지구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일종의 “복합동맹화”를 지향하고 있다(하영선 2006).

V. 동맹의 균형: 아시아외교

부상하는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여 동반 대응하겠다는 전략은 미일동맹을 초석으로 한 전후 일본의 안보노선으로 볼 때 자연스런 행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일동맹이 전통적 동맹의 모양새 즉, 중국에 대한 대항동맹의 내용을 갖게 되면 결코 일본이 안고 있는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지 못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손열 2008). 첫째,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특히 일본)와의 동반부상으로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허브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제적 활력을 희생하고라도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 상호의존을 축소할 수 없는 한 군사동맹의 한계는 분명하다. 둘째, 중국의 부상은 소프트파워적 부상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하드파워를 배경으로 하여 아시아국가들에게 소프트파워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의 하드파워적 동맹은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소프트파워적 균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자주론자들이 주장하는 중국



봉쇄론이 논단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익성향의 아베는 민주동맹을 주창하며 중국을 포위하려는 구상을 펼친 바 있으나 막상 수상에 취임한 이후 이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정경분리를 외치며 경제교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중정상회담 등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였다.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중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중 관여engagement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관여전략이 성공하려면 중국은 제한적인 현상변경적 목표를 가져야 하고 또한 기존 세력 즉, 미국과 일본과 핵심적 이익에 대한 타협 불가능한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Schweller 1999, 15). 만일 중국이 현상변경적 목표 즉, 지역패권의 장악을 목표로 하거나 대만해협에 무력적 수단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려 할 때 일본은 관여전략을 넘는 보다 강경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합동맹을 통해 대중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수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에 의한 대중 동반관여는 한계가 있다. 지역주의 때문이다. 일본은 미일동맹만으로는 외교목표가 성취되지 않음을 동아시아지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절감하였다. 2000년대 들면서 중국의 아시아외교는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중국은 증대하는 경제력을 정치카드로 구사하면서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주변국들의 중국위협론을 무마하고 지역주의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적극화하였다 (Shambaugh, 2004/5; 高原 2005, 192-215; 天児 2004, 42-46). 반면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전 협조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강화에 노력하면서 동아시아지역주의 구상을 상대적으로 방치하고 있던 차에 중국의 적극적 행보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대로 방치하면 중국이 지역전체의 이시셔티브를 장악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동맹강화론자 가운데 역사문제(우익적 가치)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인식과 우려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론이다. 고이즈미가 아시아외교를 손상시키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였던 이유는 중국과 한국이 스스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과거의 사과와 전범문제는 야스쿠니 참배와 관계없으며 주변국이 일본의 종교적 신념에 개입해서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보수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사주이며 논객인 와타나베 쓰네오渡辺恒雄는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일본이 굳이 과거를 미화할 필요는 없으며, 또 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과를 국력약화의 표시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유슈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따라서 야스쿠니의 이념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념이 일본의 전략적 가치, 나아가 미일동맹의 유용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념이 일본의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수우익적 가치를 일정하게 제어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 시도가 “동아시아공동체”론이다(김기석 2007; 손열 2008). 이는 중국을 다자제도에 결속하여 multilateral binding 의도와 행위를 일정하게 통제,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Schweller 1999, 13). 그 구체적 모습은 2004년경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伊藤憲一, 2005, 60-64). 일본은 “공동체”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역(=동아시아)을 특정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단위체로 설정하고 그 속에 자신과 중국을 내장시키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日米外相會談の概要 2005/10/29). 일본은 공식적으로 (1) 열린 지역주의, (2) 기능적 접근, (3) 보편적 가치 추구, (4) 안보,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국가간 신뢰구축이란 지역제도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내걸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Yamada 2005). 첫째, 미일동맹과 지역주의의 조화란 측면에서 일본은 열린 지역주의 즉,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이란 원칙과 함께 기능적 접근을 내걸면서 문화, 문명론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이 갖는 폐쇄성을 경계하여 미국에 배타적이지 않은 지역을 구상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편적 가치 즉, 평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서 찾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보편가치이다. 셋째,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동아시아공동체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집요하게 경주해왔다. 이들은 위의 보편적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새롭게 구성되는 동아시아는 배타성을 갖지 않는 즉, 미국의 관념 및 이익과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에 중국을 내장한다는 의미는 특정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정책의 거미망 속에 중국을 얽어 놓는 즉, 중국에게 개방성과 투명성, 평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요구함으로써 이를 벗어나는 독자적 행동에 고비용을 부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공동체론은 한편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으로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속에서 이와 함께 지역다자들에 중국을 결속하고 제도에 내장된 이념과 가치를 통해 중국의 의도와 행위를 특정하게 구속, 구성하려는 관여전략인 것이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함께 복수의 구상을 제시해 왔다. 2006년 이른바 “자유와 번영의 호”정책이 그 하나이다 (麻生外務大臣演說 2006). 외무성은 이를 일본외교의 신기축新基軸 동쪽의 미국, 호주, 중앙의 인도, 서쪽의 EU, NATO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편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을 형성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유라시아의 주위周圍 즉,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 동유럽, 발트3국을 연결하는 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은 이 지역에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을 만드는 데 새로운 외교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⁵

또한 일본은 역내국인 호주와의 관계강화를 모색해 왔다. 지난 3월 일본과 호주간에 맺은 “일-호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은 미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점에서 미·일·호 삼각동맹이 현실화되고 있는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 가치에 기본을 두고 인권, 자유, 법치



를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이른바 민주동맹이다 (安全保障協力に關する日豪共同宣言 2007/3/13). 인도에 대한 미·일의 구애 역시 각별하게 전개되고 있다.⁶ 아베(安倍晋三)수상은 2006년 9월 취임 후 미·일·호·인 4개국 전략대화창설 등 4개국 연대를 외교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安倍 2006). 이 역시 4개국 연대의 외연을 넓혀 중국을 견제하고 압력을 가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되는 것이다.

끝으로 후쿠다 수상은 “아시아태평양 내해론”을 제시하면서 유럽이 지중해를 내해로 하여 하나의 정치경제권을 형성하였듯이 태평양을 내해로 하여 아태지역을 네트워크로 엮는 구상을 선보였다.

요컨대 2000년대 일본은 미국의 변환노력(동맹변환, 외교변환)을 동맹강화의 차원에서 수용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아시아공동체, 민주동맹, 자유와 번영의 호 등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짜고자 하였다. 최근 한 보고서는 이러한 시도를 “多層協調的安全保障戰略”이라 부르고 있다 (東京財團 2008).

VI. 재균형을 향하여

일본은 21세기 새로운 전략환경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이란 지역전략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그 실행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본은 해외 군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적극적이었으며, 미군과의 동맹변환을 추구하면서 군사력 증강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이러한 군사적 경사는 그 자체 일본의 소프트파워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사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는 제로섬적 관계가 아니다. 일정한 하드파워 토대 위에서 소프트파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일본이 동맹변환을 통해 군사력 증강에 경도된다는 인상을 줄 때 그 간 일본이 쌓아 온 소프트파워 외교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하드파워 증강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일본의 노력이 군사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미일동맹인 한 주변국의 불안은 필연적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려가 그 예이다.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지역의 역사적 경험/기억에 기인한다. 일본이 군사동맹의 변환으로 경사될 때 이는 동아시아의 불안요인이 되고 오히려 일본의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동맹강화의 결과로 아시아외교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고미즈미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내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미관계가 잘되면 아시아외교도 잘 될 것”이라 외쳐왔다. 이런 까닭에 현실은 역으로 미국경사가 일본을 아시아로부터의 소외시키는 경향을 가져왔다. 나아가 고이즈미期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아베期 중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야기해 일본을 더욱 미국경사로 몰고 간 측면이 있는 반면, 그 만큼 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을 가져와 미국에 있어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함께 가는 변영의 지역을 원하지 중국전제적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작업이 중국의 부상과 위협이 지역제도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기왕의 수동적 사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변화하는 중국을 기회로 삼아 일본의 재생과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발상의 전환 속에서 중국을 결속하려는 시도라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小原 2007, 9). 반대로 이 작업이 동맹의 일체화와 미국경사에 대한 일정한 균형balancing act을 도모하는 정도의 전략이라면, 혹은 중국의 매력공세에 대항하는 연성 균형soft balancing이라면 그 전략적 효용성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손열 2008).

일본은 지역전략으로서 동아시아공동체론을 내건 동시에 민주동맹, 자유와 번영의 호, 아시아-태평양 내해론 등 서로 다른 지역성에 근거한, 서로 다른 지역적 범주의 지역구상을 매년 새롭게 내어 놓고 있다. 이는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이 추구하는 지역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오히려 동맹의 부수물이란, 따라서 진정성의 결핍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동맹과 공동체 양면에서 새로운 노력 즉, 재균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역사적인 정권교대를 이루었다. 2009년 8월 하토야마가 이끄는 민주당은 중의원 총 480석 중 308석을 석권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하토야마는 “우애”를 키워드로 하여 새로운 외교정책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는 비인간적인 미국식 시장자본주의가 지구화globalization란 이름으로 일본을 침식해 왔으며, 자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전통과 습관을 담고 있는 경제질서가 와해상태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면서, 시장의 대체개념으로 우애가 담긴 신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정치에서도 우애를 주요 개념으로 삼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이라크전의 실패와 금융위기로 쇠퇴하고 있으며 세상은 다극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속에서 일본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의 구조적 대안으로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내외적으로 미국중심주의로부터의 변환이란 거대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Hatoyama 2009).

미 해병대기지의 이전을 놓고 자민당정권이 약속한 합의“2+2”를 깨고 “재검토”를 추진하는 행위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 외교의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 기지이전 문제는 앞서 설명



하였듯이 미일동맹변환의 한 요소로서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현외 혹은 국외로의 시설이전 등을 포함한 이전 재검토란 기지정책이 어떠한 대미정책 속에서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책이 동맹변환의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변환은 수용하되 기지이전의 재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단지,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가 단지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21세기적 문제(=동맹변환)를 20세기적 발상(=자주)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토야마 정권은 전체적으로 일본외교의 아시아로의 이동Asia shift을 꾀하고 있으나 우애의 동아시아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APEC 회의에서 하토야마는 경제공영을 위한 협력, 녹색아시아를 위한 협력,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 “우애의 바다”를 만들기 위한 협력 등 다섯가지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협력의 기초로서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 범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鳩山由紀夫 2009).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일본의 동아시아구상은 이전처럼 수사 rhetoric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고이즈미의 동아시아공동체론, 아소의 자유와 평화의 호, 아베의 민주동맹, 후쿠다의 아시아-태평양 내해론 등을 잇는 또 한차례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구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하토야마의 민주당정권은 동맹과 자주,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간 동맹경사로부터 자주와 공동체로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미국(동맹)으로부터 자주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공동체를 추구할 만큼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신 정권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본이 처한 21세기적 현실이다. 모두에 서술하였듯이 21세기는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후변화, 재난, 에너지 등 분야에서 복합동맹을 추구하는 한편 다자적 네트워크를 함께 짜가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세력갈등요소가 상존하는 동아시아에서 동맹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동아시아는 네트워크적으로 새롭게 짜여가고 있다. 일본은 근대적 동맹관, 근대적 자주관, 근대적 공동체관을 넘어 근대와 탈근대를 섞는 복합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 동맹은 보다 열린, 포괄적인 제도이어야 하고, 아시아를 품기 위해 근대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자를 네트워크적으로 엮어야 한다. 어떻게 링크를 놓을 것인가는 일본의 새로운 사고와 일본이 가진 매력에 달려있다. 하토야마는 민주당의 집권을 “무혈의 유신”이라 불렀다. 과거 메이지 유신, 전후 초기와 비견될 만한 제3의 유신은 이제 막 시작이다. 또 한차례의 개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간 익숙해온 근대적 사고를 넘어서려는 고통의 몸부림이 점철되는 십 년이 필요할 것이다. ■



주(註)

- ¹ 미국은 iAsia의 플랫폼을 디자인, 완성,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 행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도한 민족주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 영토분쟁, 질병, 테러, 인도주의적 재앙 등 국제정치적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을 보안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플랫폼의 운영체제와 미국의 운영체제 간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² 한편, 중국의 맹렬한 자원확보 노력은 일본에게 안보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의 안녕을 위협해온 고유가 행진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필두로 한 BRICs의 경제발전에만 따른 소비량의 급증, 그리고 공급부족이란 지구적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 중국은 세계 제6위의 산유국이면서 한편으로 세계 제2의 원유수입국이기도 하다. 더욱이 중국의 석유수입량은 급증하여 2004년에는 전년비 34%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중국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특히 석유)의 확보가 사활적이다. 이런 환경은 일본과 중국간의 심각한 에너지 대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보적 입장에서 해상수송로sealane의 보호문제 역시 중국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³ 보다 과격한 우익세력은 1970년대 등장한 “신우익”이라 불리는 그룹으로서 “친미반공”의 기성 우익을 비판하면서 “Y(알타)P(포츠담)체제”의 타도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미소 양대국에 의한 전후세계의 분열지배를 낳은 알타체제와 점령하에서 반천황, 반민족, 반국가적 전후상황으로서 포츠담체제를 타도하자는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현행헌법, 정·관·재 유착으로서 기존 보수체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 ⁴ 모치즈키(Mochizuki 2007)는 이들을 “협력적 관여와 소프트 헷징(위협분산)”으로 부른다.
- ⁵ 《2007년도 외교청서外交靑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 구상은 미일동맹의 강화, 근린외교란 전통적 외교목표에 더하여 “일본외교의 신기축新基軸”으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麻生外務大臣演說 《「自由と繁榮の弧」をつくる》.
- ⁶ 2006년 3월 부시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핵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승인한 바 있고, 아베수상은 같은 해 12월 인도총리와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참고문헌

- 김기석. 2007. "일본의 동아시아지역주의 전략." <국가전략> 13집 1호.
- 박영준. 2008. 《제3의 일본: 21세기 일본 외교·방위정책에 대한 재인식》.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손열. 2008.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하영선 편.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원덕. 2002. "일본의 국가진로." 이원덕 외 《동요하는 일본의 신화》. 서울: 지식마당.
- 이치로·오자와. 2004. 《일본개조계획》. 서울: 지식산업사.
- 하영선 외. 2006.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김상배 외. 2006. 《네트워크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 Armitage, Richard and Joseph S. Nye Jr. 2007a.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Report.
- _____. 2007b.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Campbell, Kurt M. 2008. *The Balance of Power: America in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Christensen, Thomas. 2003.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ed.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o, Young Nam and Jongho Jeong. 2008. "China's Soft Power." *Asian Survey* May-June.
- Clinton, Hillary. 2009a. "Statement of Senator Hillary Clint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13 (accessed April 27, 2009). <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9/ClintonTestimony090113a.pdf>.
- _____. 2009b.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The Asia Society*. February 13 (accessed April 27, 2009).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33.htm>.
- _____. 2009c.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llaborating to Address Global Concerns." February 16 (accessed April 27, 2009).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7349.htm>.
- Gates, Robert. 2009.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88, No.1 (Jan/Feb).



- Goldman Sachs. 2003.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October 1.
<http://www2.goldmansachs.com/ideas/brics/book/99-dreaming.pdf>.
- Green, Michael J. 2001. *Japan's Reluctant Realism*. New York: Palgrave.
- Higgott, Richard. 1998. "The Asian Economic Crisis: A Study in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Political Economy* 3, 3.
- Ikenberry, G. John. 2004. "America in East Asia: Power, Markets, and Grand Strategy" In *Beyond Bilateralism*, ed. Ellis Krauss and T.J. Pempe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chizuki, Mike. 2007. "Japan'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0, No. 4-5(August-October).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2. "Joint Statement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December 16.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joint0212.htm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5. "Joint Statement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February 19.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joint0502.html>.
- _____. 2006. "Japan-U.S. Summit Meeting: The Japan-U.S. Alliance of the New Century." June 29.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ummit0606.html>.
- Samuels, Richard J. 2007.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hambough, David. 2004. "China Engages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29, No.3(May).
- Schweller, Randall L. 1999. "Managing the Rise of Great Powers: History and Theory," In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Emerging Power*, ed.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London: Routledge.
- Yamada, Takio. 2005. "Toward a Principled Integration of East Asia: Concept of an East Asian Community." *Gaiko Forum*. Tokyo. Japan. Fall.
- 강상중(姜尚中). 2003. 《아시아孤兒でいいのか》. ウエイツ.
- 고원명생(高原明生). 2005. "中国の新安全保障観と地域政策," 五十風暁郎 外編. 《東アジア安全保障の新展開》. 明石書店.
- 곡구성(谷口誠). 2004. 《東アジア共同体—經濟統合のゆくえと日本》. 岩波書店.



- 구산유기부(鳩山由紀夫). 2009. “鳩山総理によるアジア政策講演: アジアへの新しいコミットメント-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実現に向けて-”
<http://www.kantei.go.jp/jp/hatoyama/meibo/daijin/index.html>.
- 대외관계(対外関係)タスクフォース. 2002. 《21世紀日本外交の基本 전략—新たな時代、新たなビジョン、新たな外交》. November 28.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2/1128tf.pdf>.
- 도부리부(渡部利夫). 2005. 《日本の東アジア戦略》. 東洋經濟新報社.
_____. 2006. “『東アジア共同体』の危うさ.” 竹内宏·村松岐夫·渡辺利夫編. 《徹底検証東アジア》. 勁草書房.
동경재단정책연구부(東京財団政策研究部). 2008. 《新しい日本の安全保障戦略: 多層協調的安全保障戦略》. October. <http://www.tkfd.or.jp/admin/files/081008.pdf>.
- 마생외무대신(麻生外務大臣). 2006. 《自由と繁榮の弧」をつくる》. November 30.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18/easo_1130.html.
_____. 2006a. 《東アジアの将来の安定と繁榮を共に目指して: 過去の教訓、そして夢を見る 自由に向けたビジョン》. May 3.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18/easo_0503.html.
_____. 2006b. 《アジア共同体 への道--構想と展望における麻生太郎外相スピーチ 「ネットワーク型アジア」の未来を構想する》. May 26.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18/easo_0526.html.
- 모리화자(毛利和子). 2006. 《日中関係: 戦後から新世代へ》. 岩波書店.
- 방위성(防衛省). 2004. 《平成17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December 10.
<http://www.mod.go.jp/j/defense/policy/17taikou/taikou.htm>.
- 서부매(西部邁). 2003. “核武装論が自主防衛への道を切り開く.” <正論>. October.
- 성전조부(盛田照夫)·石原慎太郎. 1998. 《「NO」と言える日本: 新日米関係の方策》. 光文社.
- 소웅영이(小熊英二). 2002. 《〈民主〉と〈愛国〉—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 소원아박(小原雅博). 2005. 《東アジア共同体》. 日本經濟新聞社.
- 안배진삼(安倍晋三). 2006. 《美しい国へ》. 文芸春秋.
- 외무성(外務省). 2007. 《安全保障協力に関する日豪共同宣言》. March 13.
http://www.mofa.go.jp/mofaj/area/australia/visit/0703_ks.html.



- 이등헌일(伊藤憲一). 田中明彦 監修. 2005.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針路》. 日本放送出版協会.
- 정촌외무대신(町村外務大臣). 2005. 《日米外相会談の概要》. October 29.
http://www.mofa.go.jp/mofaj/kaidan/g_machimura/usa_anpo05/gaiyo.html.
- 조일신문사(朝日新聞社). 2001. 《知恵蔵一朝日現代用語》. 朝日新聞社.
- 중도령웅(中嶋嶺雄), 古森義久. 2006. 《米中新戦争》. ビジネス社.
- 중서휘정(中西輝政). 2003. “日本国核武装への決断.” <諸君>. August.
- 천아(天児) 慧. 2004. “日中外交比較から見た日中関係.” 毛利和子, 張蓂嶺 編. 《日中関係をどう構築するか》. 岩波書店.
- _____. 2005. “新国際秩序構想と東アジア共同体論.” <国際問題>. No. 538 (January). 화전춘수 (和田春樹). 2003. 《東北アジア共同の家 新地域主義宣言》. 平凡社.



필자약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손열교수는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 외국인연구원, 와세다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연구관심은 일본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지역주의이며, 최근 저술로는 “21세기 동아시아: 경합하는 국제사회(2009),” “소프트파워의 정치: 변화하는 일본의 정체성(2009),” “Japan’s East Asian Community(2009),” “Japan Between Alliance and Community(2009)”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소(소장: 천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 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kim@eai.or.kr
최은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30) ehchoi@eai.or.kr

